

부처예산 편성 막바지 총력전

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 군산공장 폐쇄 따른 지역경제 위기상황 극복 위해 김승일 행정부지사, 정부 방문 공공의료대학 설립 등 현안사업 예산반영 건의

전북도가 2019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로 GM군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지역경제의 위기 상황을 기회의 도약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처예산 편성단계에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각 부처에서는 2019년 부처예산 5월 25일까지 기재부로 제출할 예정으로, 전북도는 산업위기대응 지원사업, 지역공약 및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가예산사업이 부처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 대응하고 있다.

전북도 실국장들이 연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15일~16일에는 행정.정부부지사가 릴레이 활동으로 기재부, 국토부 등 6개부처를 잇달아 방문, 도정 현안 25개사업에 대해 중점 설명 활동을 펼친다.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15일 복지부차관, 문체부, 환경부 국·과장을 차례로 만나 사업지원의 필요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9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먼저 복지부 권덕철 차관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서남대 폐교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4월 11일 정부에서 확정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하여 남원의료원을 국립으로 전환하여 부속병원으로 구축하고 서남대학교(재학생 1,500여명) 폐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지역민심을 고려하여 공공의료에 장점이 많은 의과대학 체계의 대학 설립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위한 국비 3억원, '통합형 노인일자

리센터 건립' 42억원, 탄소복합재 등 신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생체적합성의료기기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산업 육성' 14억원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환경부 박형근 문환경정책국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20년까지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농어촌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정비 등으로 2019년 국비 1,324억원 전액이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전북도는 부처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는 25일까지 주요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 지휘부 등 도정 역량을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최우선을 두고 총력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탐스럽게 익었네?” 15일 원주군의 한 복숭아 농가에서 관계자들이 탐스럽게 익은 조생종 복숭아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안전문화 확산 기여한 공로자에게” | 전북도 공무원 3명 국가재난관리 유공자 표창

민간부문 장경하 TBN PD 대통령 표창 등 수상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국가재난관리에서 녹조근정훈장과 대통령,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 포상을 5명이 수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13명이 수상했다.

전북도는 15일, 재난안전분야 공무원과 민간인이 협업을 통해 재난관리체계를 구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태현 전북도 안전정책관은 지난해 무주 WIT 세계태권도대회와 무주 반딧불 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안전관리체계 매뉴얼을 구축, 또 선제적 예방적으로 안전관리에 나섰다.

자율방재단, 수난구조대, 재난구조협회 등 함께 참여해 여름철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등에 앞장선 공로 등도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김창호 전북도 생활안전팀장은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 팀장은 안전신문고 실적 전국 1위를 달성하였고, 안전신고 생활화와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간부문에서는 장경하 TBN전북교통방송 PD가 대통령 표창을, 송행택 임주산업단지 정석케미칼 부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표창은 재난안전에 선도적인 전북을 만들기 위해 민간이 협업으로 이루어 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양대 노총 장·단점 살려 상생을”

도의회, 노동절 기념 노동단체 정책 토론회

전북도의회는 15일 제128주년 세계노동절(5월1일)을 맞아 한국GM 군산공장 사태와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 노동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했다.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양용모 도의장과 전북노사발전재단 민원기센터장, 민주노총 이창식 부본부장, 한국노총 최한식 사무처장, 심병국 사무국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세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전북의 노동운동과 현안, 그리고 과제,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 군산조선소,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관련 노동계 입장, 청년실업 등 노동현안을 놓고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한국GM이 폐쇄되기 전에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토론회에 그치지 않고 정책입안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0년

전북도의회는 15일 세계노동절(5월1일)을 맞아 노동문제 토론회를 열었다.

만에 한 자리에 모여 노동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장이 마련돼 의미 있다며 양대 노총의 지향점은 같은데 노동현장에서의 풀이 깊게 현실이라 장·단점을 살려 상생하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양용모 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도의회에서 세계노동절을 맞아 자유로운 방식으로 토론회를 준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사회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로 알고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예비후보자 2명 고발

〈정정보도〉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도의원 예비후보자 A씨와 B씨를 5월 9일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선관위에 따르면 도의원 예비후보자 A씨는 2018년 3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A대학교 출강교수”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자신의 명함 1,202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가 있다.

도의원 예비후보자 B씨는 ‘(현)농민·한농연 감사’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자신의 명함 3,821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가 있으며, 특허를 2건 출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여건을 출원하였다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보도자료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위반된다.

전북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조직적 비방·흑색선전 등의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6·1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도교육감 후보자 동향

임정엽 도지사 후보

“익산역 역세권 개발할 것”

6·1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에 출마한 민주평화당 임정엽 후보가 KTX 익산역 역세권 개발과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통해 익산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정엽 후보는 15일 익산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은 철도교통을 통한 호남의 관문이자 플랫폼”이라며 “KTX 익산역사를 더 확장하고 역세권을 키워나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익산역사는 민경강 변에 이르는 남익산 지역까지 연결해서 개발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익산이 전북과학기술혁신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원 등을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또 익산과학기술원 설립에 주력할 뜻을 시사했다.

임 후보는 “전북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전국 18개 광역 시·도 중 지난 213년 7위에서 2014년 8위, 현재는 1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면서 과학기술원 익산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권태홍 도지사 후보

“전북, 공공건강 복지 허브로”

6·13 지방선거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15일 “전북을 공공건강복지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전북을 건강복지의 메카로 성장시키는 전략이 아닐까 도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건강-일자리 투트랙 전략이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현재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이 들어설 전망이다. 중앙에 간 호대학 설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 지역의 경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소의 경우 진료 중심에서 건강관리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겠다”며 “요양시설이 부족하거나 낙후된 지역은 소규모 공공요양시설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산부터 노후까지 개인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의료와 돌봄, 복지가 한번에 제공되는 주민 맞춤형 건강복지 통합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김승환 교육감 예비후보

“공교육 혁신 완성할 것”

6·13 지방선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5일 “공교육 혁신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예비후보는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교육감) 임기 동안 일관되게 공교육 혁신 모델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혁신학교의 소중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학교 혁신 작업에 박차를 가해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공교육 혁신을 위한 방안들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며 “수능절대평가로 대학 서열화 완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산정 기준 개선, 사서교사·진로상담교사 증원, 교원성과급제도 폐지 등의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해 우리는 적폐 정권을 허물고 촛불 정부를 세웠다”며 “우리가 세운 정부가 교육개혁을 성공시키도록 적극 돕는 동시에 정부로부터 전북교육에 대한 최대한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낼 확신도 있다”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반

서거석 교육감 예비후보

“김승환, 여론 호도 멈춰야”

6·13 지방선거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초학력 문제를 수학능력시험이란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김승환 예비후보를 지적했다.

15일 서거석 예비후보는 자료를 내고 “최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전북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며 “그러나 김승환 예비후보는 평가의 본질이 학업성취도평가와는 전혀 다른 수학능력시험의 하위권 등급을 비교 대상으로 거론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후보는 “기초적인 학력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아이들의 비율이 전국에서 많다”며 “그러나 김승환 후보는 학생들의 학력에 문제가 없다는 듯이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환 후보는 학력저하의 심각성 논란과 관련,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고 도민 앞에 사과해야 옳은 것이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

스승의 날 재정립 방안 제안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세계수업연구학회WALS, 한국대학교회)는 “스승의 날 학교 현장은 재량 휴업을 하는 학교와 하지 않는 학교로 나뉘고,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논란을 겪고있는 가정 통신문을 보내고, 외부의 학교출입을 봉쇄하기에 분주한 것이 현실이다”고 안타까워하면서 교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신뢰회복을 위한 스승의 날 재정립 방안을 제안했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오늘의 스승의 날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피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고,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스승 공경은 퇴색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교육의 관점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는 “전북교육이 앞장서서 스승의 날을 본래의 의미와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화합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높여가는 학교문화의 기념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동취재반

이미영 교육감 예비후보

“전북교육 적폐 청산해야”

6·13 지방선거 이미영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5일 “전북교육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영 예비후보는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 8년간 전북교육에서 가장 심각했던 적폐는 도민과 소통하지 않는 교육감의 불통과 아집, 독선적인 교육행정과 파행적인 인사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소통과 공감을 원하는 국민들의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전북 교육계 적폐청산과 교육개혁, 교육지치를 적극 실현하겠다”며 “전북도민이 행복하고 아이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전북교육으로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사람중심, 현장중심의 사랑이 넘치는 교육행정을 펼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서로 존중하며 지역사회가 마을학교가 돼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지역교육공동체를 크게 활성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기동취재반